

이 자료는 2016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 직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  
**2017년 예산안**

---

2016. 8.



# 목 차

I. 2017년 예산안 모습 .....	1
1. 기본방향 .....	1
2. 재정총량 .....	3
3.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5
II. 투자의 중점 .....	6
1.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7
2.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14
3.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	19
4.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	24
5. 국방·치안·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31
III. 재정개혁 추진 .....	35
<별첨> 분야별 자원배분 .....	37

# I. 2017년 예산안 모습

## 1 기본방향

### ①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 부여
-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 ②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
-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③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낭비 소지 제거
-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16.8월 입법예고)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

**기본  
방향**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투자확대 및 효율화
- 청년일자리 확대 및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 문화융성을 적극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력 회복**

-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중점**

**민생 안정**

-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가정양립 등 저출산 극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국민 안심**

- 국방·안보, 재난대응과 치안강화
- 국민생활환경 개선

**재정  
개혁**

**재정효율성 제고**

- 재량지출 구조조정
- 유사·중복 통폐합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 「재정건전화법」 시행
- 채무 및 수지준칙 도입

2

재정총량

-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 ◇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조성

□ 총수입은 414.5조원 (+6.0% 증가)

- 국세수입은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 경제활동 실적 개선 등으로 8.4% 증가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3.7%) 등으로 2.7% 증가

□ 총지출은 400.7조원 (+3.7% 증가)

-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총지출 증가율은 3.7%로 '16년 2.9% 대비 +0.8%p)

< 2017년 재정운용 모습 >

	'16예산 (A)	'17예산안 (B)	증감 (B-A)	(조원, %)
				%
◇ 총수입	391.2	414.5	23.3	6.0
▪ 예산	250.1	267.9	17.8	7.1
(국세수입)	222.9	241.8	18.8	8.4
▪ 기금	141.1	146.6	5.5	3.9
◇ 총지출	386.4	400.7	14.3	3.7
▪ 예산	263.9	273.4	9.4	3.6
▪ 기금	122.5	127.3	4.8	4.0

## □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보다 개선

- (재정수지) '17년  $\Delta 1.7\%$ 로, '15~'19계획( $\Delta 2.0\%$ ) 보다 0.3%p 개선
- (국가채무비율) '17년 **40.4%** 수준으로 전망되며 '15~'19계획(41.0%)보다 0.6%p 개선
  -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

	'16예산 (A)	'17년		증감 (B-A)
		'15~'19계획	예산안(B)	
◇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36.9$ ( $\Delta 2.3$ ) <sup>1)</sup>	$\Delta 33.1$ ( $\Delta 2.0$ )	$\Delta 28.1$ ( $\Delta 1.7$ )	8.8 (0.6%p)
◇ 국가채무 (GDP 대비 %)	644.9 (40.1) <sup>1)</sup>	692.9 (41.0)	682.7 (40.4)	37.8 (0.3%p)

1) 추경기준으로는 재정수지 GDP대비  $\Delta 2.4\%$ , 국가채무 GDP대비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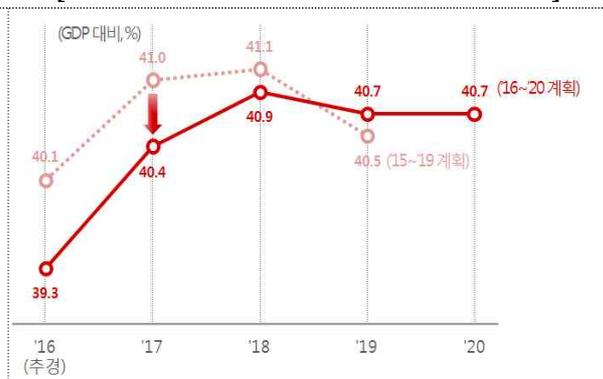
## □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유지 전망

- 재정준칙 도입,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

[ 재정수지 : 단계적 회복 ]



[ 국가채무 : 40% 수준에서 유지 ]



## 3

##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지원

(조원)

구 분	'16년(A)	'17안(B)	증감	
			(B-A)	%
<b>◆ 총지출</b>	<b>386.4</b>	<b>400.7</b>	<b>14.3</b>	<b>3.7</b>
1. 보건·복지·노동	123.4	130.0	6.6	5.3
※ 일자리	15.8	17.5	1.7	10.7
2. 교 육	53.2	56.4	3.3	6.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5.9	4.7	11.4
3. 문화·체육·관광	6.6	7.1	0.5	6.9
4. 환 경	6.9	6.9	-	0.1
5. R&D	19.1	19.4	0.3	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0.3	△2.0
7. SOC	23.7	21.8	△1.9	△8.2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0.1	0.6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1.5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0.5	3.1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4.4	7.4
※ 지방교부세	36.1	40.6	4.5	12.5

## II. 투자의 중점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투자확대 ·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대분야 대비 최고수준 투자</li> </ul>
	2. 청년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선호 일자리 창출</li> <li>창업지원 확대</li> </ul>
	3.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장애인·노인 등 맞춤형 지원</li> </ul>
	4. 고용서비스 확대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복지+센터 확충</li> <li>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li> </ul>
미래 성장 동력	1.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전략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li> <li>제조업 3.0, 농수산업, 新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li> </ul>
	2. 문화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창조융합벨트</li> <li>ICT·문화올림픽</li> <li>관광·스포츠·문화 고부가가치화</li> </ul>
경제 활력 회복	1. 수출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다변화 및 기업해외진출 지원</li> <li>수출바우처 도입</li> </ul>
	2.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성장→글로벌화→재창업</li> </ul>
	3.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인프라 및 산업기반 시설 확충</li> <li>지방재정 대폭 확충</li> </ul>
민생 안정	1. 저출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양립 단계별 지원</li> </ul>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생, 중장년, 어르신</li> <li>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li> </ul>
	3. 복지 · 의료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li> <li>국민기초건강 증진</li> </ul>
국민 안심 사회	1.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전력 투자</li> <li>장병생활여건 개선</li> </ul>
	2.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li> <li>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li> <li>미세먼지·배출가스·석면제거</li> </ul>

◇ 재정지원 방향

<p><b>일자리 투자확대·효율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예산 전년대비 10.7% 증가</li> <li>■ 일자리 사업 효율화 노력 병행</li> <li>- 성과미흡 사업 폐지·축소</li> <li>-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 통합</li> </ul>	<p><b>청년 일자리 창출</b></p> <table border="1"> <tr> <td> <p><b>청년선호 일자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li> <li>·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li> </ul> </td> <td> <p><b>창업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li> <li>· 대학창업펀드 신설</li> </ul> </td> </tr> <tr> <td> <p><b>취업역량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맞춤형학과 투자확대</li> <li>· 일학습병행제 활성화</li> </ul> </td> <td> <p><b>취업장기근속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성패 등 청년취업 지원 대폭 확대</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도입</li> </ul> </td> </tr> </table>	<p><b>청년선호 일자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li> <li>·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li> </ul>	<p><b>창업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li> <li>· 대학창업펀드 신설</li> </ul>	<p><b>취업역량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맞춤형학과 투자확대</li> <li>· 일학습병행제 활성화</li> </ul>	<p><b>취업장기근속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성패 등 청년취업 지원 대폭 확대</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도입</li> </ul>
<p><b>청년선호 일자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li> <li>·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li> </ul>	<p><b>창업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li> <li>· 대학창업펀드 신설</li> </ul>				
<p><b>취업역량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맞춤형학과 투자확대</li> <li>· 일학습병행제 활성화</li> </ul>	<p><b>취업장기근속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성패 등 청년취업 지원 대폭 확대</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도입</li> </ul>				
<p><b>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b></p> <table border="1"> <tr> <td> <p><b>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li> <li>· 일가정양립 지원확대</li> </ul> </td> <td> <p><b>장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취성패 신설</li> <li>· 직업훈련·근무환경 개선</li> </ul> </td> </tr> <tr> <td> <p><b>노인·중장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확대</li> <li>· 임금피크제 지원</li> </ul> </td> <td> <p><b>비정규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전환 지원금 확대</li> </ul> </td> </tr> </table>	<p><b>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li> <li>· 일가정양립 지원확대</li> </ul>	<p><b>장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취성패 신설</li> <li>· 직업훈련·근무환경 개선</li> </ul>	<p><b>노인·중장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확대</li> <li>· 임금피크제 지원</li> </ul>	<p><b>비정규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전환 지원금 확대</li> </ul>	<p><b>고용서비스 확대개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복지+센터 확대 및 취업지원 전담인력 확충</li> <li>■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li> <li>■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li> </ul>
<p><b>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li> <li>· 일가정양립 지원확대</li> </ul>	<p><b>장애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취성패 신설</li> <li>· 직업훈련·근무환경 개선</li> </ul>				
<p><b>노인·중장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확대</li> <li>· 임금피크제 지원</li> </ul>	<p><b>비정규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전환 지원금 확대</li> </ul>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b>청년 취업 지원</b> (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	21만개	24만개
<b>일학습병행 기업수</b>	6,300개	10,000개
<b>고용복지+센터</b>	70개	100개
<b>고용안정장려금</b>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중소) 20만원/월	(중소) 30만원/월

## [1] 일자리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 일자리 예산 전년대비 10.7% 증가

- 일자리 예산은 17.5조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1.7조원)
  -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시 가장 높은 증가율
-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
  - \* 일자리 전체 10.7% / 고용서비스 21.5%, 창업지원 16.8%, 직업훈련 12.3% 등

### □ 일자리 투자 확대와 함께 효율화 노력 병행

- (재구조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토대로 성과미흡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17년 △0.4조원)
  - 과거 위기시 크게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사회적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
  -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축소(5→3만명)하고,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은 폐지
- (통폐합)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안정중심으로 통합(16→6개) 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통합(33→20개)
  - 특히,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지원 수준을 일원화\*하여 사업단순화

\* (인건비) 중소 60, 대기업 3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 20, 대기업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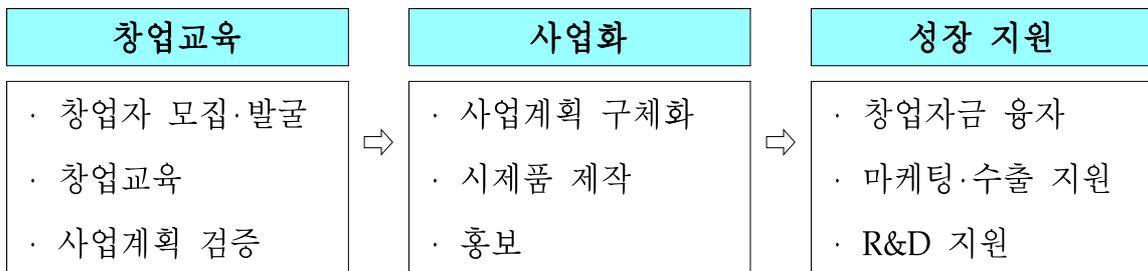
## [2] 청년 일자리 확대

### □ 청년선호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2,616억원) 등 문화·보건·의료 부문 투자 확대
  -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294억원) 등 新산업분야 지원 확대
-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 문화, 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2,372→2,528억원)
-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3,397명 증원)

### □ 창업지원 확대

-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쏠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신규 도입(500개팀, 500억원)



- 창업선도대학(34→40개)을 확대하여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753→922억원)
  -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신규로 조성(150억원)
-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1,000→1,200억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4,500→16,500억원)

## □ 미스매치 해소 위한 청년 취업역량 제고

- (일경험) 조기취업 유도 위해 재학단계부터 **기업체험**(1→1.1만명) 및 **근로체험**(교외근로 장학금, 3.3→3.7만명) 기회 확대
  -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확대(0.4→1.0만명) 및 과정내 **소그룹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 신규 도입
- (맞춤형 교육·훈련) 청년 선호 및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968억원)
  - 바이오, Io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10개 과정, 200명)와 **신성장·융복합분야**(3개 과정, 90억원) 고숙련 훈련과정 신설
-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 확대**(6,300→10,000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60→200개교) 등 재학생대상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졸업후에는 고숙련 **훈련과정**(P-tech, 3개) 신설

## □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13→16만명)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지원 확대**(16→21만명)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공모 지원(신규 35억원)하고, '채용의 날' 등 채용 행사시 **면접 컨설팅 서비스** 신규 제공(7만명)
    - \* 면접 특강, 시제품화 등 아이디어 공모·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별 1억원)
  - 고용서비스 위탁기관의 **위탁단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 \* 취업성공패키지 : 양질의 일자리 인센티브 30만원 → 임금수준에 따라 20~150만원
    - 중소기업청년인턴 : 강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5만원 → 10만원
- (장기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1→5만명)
  - \*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정부 600 + 기업 300 + 개인 300만원)

### [3]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 여성 :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0.7→1만명)
  -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40만원까지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확충(150→155개)하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 복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여성 친화적인 근로 환경 조성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20→40만원)와 지원인원(2→4천명) 2배 확대
    - \* 주 15~25시간 단축시 : 20→40만원 / 주 25~30시간 단축시 : 12→24만원
  - 유연·재택근무 도입기업에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 지원(보조 2,000, 융자 4,000만원)하고,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20→40만원)

#### □ 장애인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및 직업훈련 강화

- (취업지원)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월35→36천명)
  - \* 훈련기간 최대 12개월, 훈련수당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를 신설, 일 4시간 근무 후 취업교육·구직활동 등을 연계하여 민간일자리로 전환 유도('17년 1,500개)
-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맞춤형 훈련센터 확대(1→3개) 및 직업훈련 참여수당 인상(16~27→31.6만원/월)
- (근무환경 개선) 취업 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880→1,000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0.6→0.7만점) 확대

## □ 노인·중장년·비정규직 : 일자리 기회확충 및 정규직 전환촉진

- (노인)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5만개) 확대
  - \*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 지원
- 자원봉사클럽(1,600→1,800개)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 (중장년) 장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0.9→1.1만명) 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 확대(1.5→2.9만명)
  -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50% 지원(연 1,080만원 한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 \* ('16) 기간제, 파견,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상승분의 70%  
→ ('17) 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임금상승분의 80%
- 일터혁신 컨설팅(1,924→2,533개소)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수립 지원

## □ 기타 고용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수수료 후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기간을 확대
  - \* ('16) 총지급액 100만원 : 1개월 20만원, 3개월 30만원, 6개월 50만원  
→ ('17) 총지급액 150만원 : 3개월 30만원, 6개월 40만원, 12개월 80만원
- 지급액 및 지급기한 연장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5.1→5.7조원)
  - \* 지급액 평균임금 50% → 60%, 일 상한 4.3 → 5.0만원, 지급기한 +30일 연장
- 출퇴근 재해 인정 등 산재보험급여 보장성 강화(4.3→4.6조원)
- 기업 경영애로 등에도 고용유지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일 상한액 인상(4.3→5.0만원/일)

## [4] 수요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 □ 고용센터 등 고용서비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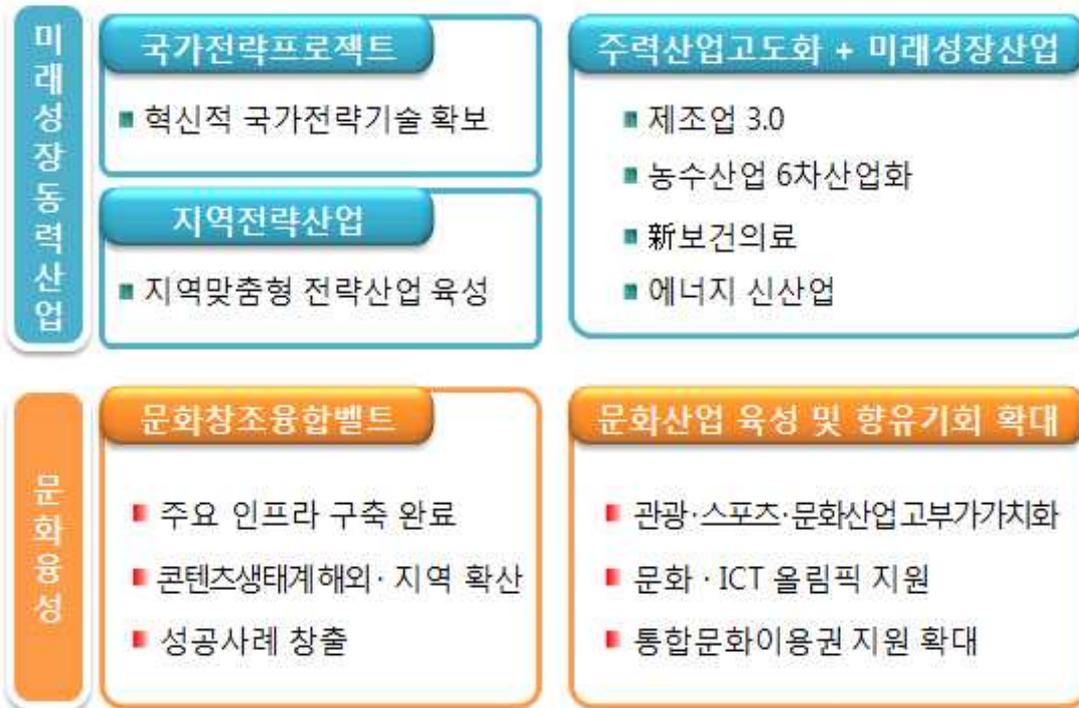
-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대(70→100개소)**
  -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 전담 인력 341명 확충**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장 공모 및 민간기관 인소싱\*(In-Sourcing) 시범 도입(6개소)**
    - 민간경쟁의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 민간 전문기관 고용센터 내 입주,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위탁
- 대학내 원스톱 고용서비스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관 및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70개소)로 확대·전환**

###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 (1단계) 일자리 사업 유형별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성과평가도 강화
  - \* 직접일자리(일모아시스템), 직업훈련(HRD-Net), 고용서비스(워크넷)
- (2단계)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17.12월, 신규 107억원)



## ◇ 재정지원 방향



##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스마트공장 보급	1,245개	1,750개
스마트팜 면적	2,235ha	4,000ha
콘텐츠산업 매출액	105조 원	111조 원
국가전략프로젝트	-	9대 과제

## [1]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 □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 추진(300억원)
  - \* 과학기술계·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주재 제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8.10일)에서 논의·확정
- (성장동력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95억원)
- (국민행복분야)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205억원)

### □ 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 뒷받침

- 지역전략산업 전체 3.1조원\*(국비 1.7조원)을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
  - \* 3년간('17~'19) 총투자규모 3.1조원 = 국비 1.7 + 지방비 1.0 + 민자 0.4
- 특히 '17년부터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중점지원\*('17안 3,874억원)
  - \* 첨단 기계·소재산업(758억원), 에너지신산업(526억원), 미래형 자동차·항공(1,556억원) 및 생명과 건강을 위한 웰빙산업(1,035억원) 등
-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1,434→ 1,746억원)
-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

## □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

- (제조업 3.0) ICT 스마트공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제고
  - '20년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17년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1,245→1,750개)
- (농수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와 스마트팜 확산 지원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255→312억원)
  -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신규 35억원), 스마트축사(200→269억원) 등 스마트팜 지원 확대
- (新보건의료)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및 융·복합분야 육성
  -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및 신약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임상연구 개발 투자 확대(2,154→2,471억원)
    - \* (신약) 바이오의료기술개발 : ('16)330 → ('17안)600억원
    - (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개발 : ('16)194 → ('17안)280억원
  - 나노·줄기세포, BT·IT 융합 등 융·복합 연구강화(1,144→1,206억원)
- (에너지 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신산업 창출 지원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Mission Innovation) 지원 강화
    - \* 청정에너지 6대 분야 : ('16)4,536 → ('17안)5,844억원
  -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피크저감용, 비상전원용 ESS 융합 시스템을 확대 보급

## [2] 문화융성

###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성과 확산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
  -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 소비·구현공간 조성(17년말)
  -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확장·이전하고 교육과정도 확대(청계천, 1개 과정 → 홍릉, 3개 과정, '17.3월)
-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
  - **국내외 유망스타트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지방에 문화벤처단지를 신규 조성**(2개소)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
- 문화벤처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을 확대(188→400개)하고 법률·회계·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더 많은 성공사례 창출**

### □ 평창올림픽 인프라 완공 및 문화·ICT 활용 사전 붐 조성

- 평창올림픽 **12개 경기장 및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완공
  - \* 정선알파인 경기장, 진부역 진입도로, 동흥천-양양고속도로 등 주요 SOC '17년 완공
-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올림픽**을 본격 지원
  -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
-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현단지(IoT street)**를 신규 조성(75→114억원)

## □ 관광 · 스포츠 · 문화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선별 · 패키지화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
  - \* 명품 관광루트(십리대숲, 대왕암, 태화강 등) 개발,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 활용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 유명음식 · 특산품의 명품화 컨설팅 등
- **10개 권역별**(권역별 24억원 수준)로 특성화 추진
  - \* (예시) 강원(강릉·평창), 경북(울산·경주), 서남해안(순천·여수) 등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창업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1→2개소) 구축 등 지원(343→533억원)
- **콘텐츠 · 관광 · 스포츠편드 출자 확대**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360→800억원, M&A펀드 신설 및 드라마펀드 확대), 관광기업 마이크로VC펀드 신설(50억원), 스포츠편드(200→300억원) 등

## □ 국민 생활 속 문화 · 체육 점점 확대

- 英, 獨 축구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시스템\*)를 도입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 지원(신규 28억원)
  - \* 프로-아마의 수준별 리그(142개 기초리그, 17개 광역리그 등) 신설 · 운영하고 승강제(리그별 상위권 팀은 상부리그로 승격)를 도입
- **통합문화이용권**(5만원→6만원)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 인상(7→8만원, 만5세~18세)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 신설(45억원, 9개)
  - \*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창작, 전시 등 주민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
- **휴일없는 박물관 · 미술관**을 수요가 많은 지방으로 확대
  - \* ('16년 추경) 서울 5개소 → ('17년) 경주 · 광주 · 전주박물관 등 총 11개소

◇ 재정지원 방향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TIPS프로그램 선발	60팀	90팀
R&D바우처 지원	0.4조원	0.7조원
철도 연장	4,254km	4,375km
지방교부세	36.1조원	40.6조원

## [1] 수출 역량 제고

### □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

-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하여 신시장 진출 확대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시장 진출 소과정 지원(신규 120억원)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92억원)
  - \* 농식품 수출은 중·미·일 3개국 비중이 약 44% →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 정보조사, 마켓테스트 등 新 시장 수출 개척단\*을 운영하고, 신규 수출국의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 생산농가·수출업체·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지 선호도 등 조사

###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서비스 내실화

-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 사업을 신설(신규 1,778억원)
  - \* 기존 칸막이식 개별사업을 통합,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와 KOTRA 등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
  -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 해외전시회 등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들의 적극적 해외진출 유도
    - \* 해외지사대행 ('16)152→('17)360억원 / 해외전시회 ('16)219→('17)229억원
  -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출금융 등 서비스,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수출지원 스마트앱」 제작·배포(신규 8억원)
- 기업선호도와 성과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 확대
  - 퇴직 전문무역인력의 컨설팅 제공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46→91억원)

## [2]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 □ 창업 :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더 쉽게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방식의 지원을 확대(323→500억원)
-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560→770억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 성장 : 창업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1,000개사)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2,394억원)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융자·보험 및 보증** 지원을 확대(80.7→83.3조원)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1,137억원)

\*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100억원)을 신규 도입하여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 재창업 : 성장 잠재력있는 기업의 재창업 지원

- 재도전 사업계획을 가진 우수한 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53→100억원)

### [3] 지역경제 활성화

#### □ 지역의 핵심 SOC 사업 신규 추진

- 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수도권 KTX 수혜지역 확대\* 및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신규 사업 추진
  - \*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건설 : '17년 설계비 60억원
- 새만금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인 남북2축 도로\*(21→314억원)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규 착공(14억원)
- 영남권과 제주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신규 95억원)
-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555→ 634억원) 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
  - \*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 : 신규 3억원

#### □ 기존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 강화

- '17년 준공 또는 조기 개통 가능사업에 대한 완공소요 적극 지원(준공건수 85 → 93건)
  - \* (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1,478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등
  - \* (철도) 원주~강릉 3,040억원, 포항-삼척(포항-영덕 구간) 5,096억원 등
-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등 도로건설 신규 착공(26건\*)을 통한 지역간 교통·물류망 확충
  - \* 국도건설 14건('16년 정부안 수준) + 산단 진입도로(11→ 12건)
- 국도교량 내진보강 및 도로 위험구간 정비, 철도 노후시설물 개량 등 시설물 안전투자 강화(0.7→0.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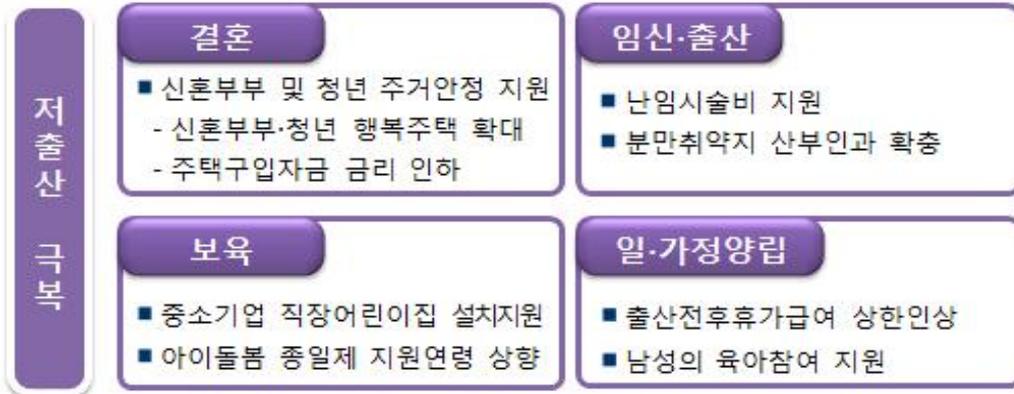
## □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32곳)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0.6 → 0.8조원)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지역특성에 맞추어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확대**(1,380→1,545억원)
  - 인접 시·군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102개소, 650억원) 및 새뜰마을사업 35개소 확대(총 186개, 895억원)
- 상수도는 지방업무이나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512억원)
  - \* 군 지역 총 22개소(상수관망 20개소 476억원, 정수장 2개소 36억원)
- 고향방문·봉사·기부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고향희망심기 사업** 신규 지원(10억원)
  - \* 프로그램 발굴,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추진

## □ 지방재정 대폭 확충

-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대**('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
  - \* 지방교부세: 36.1→40.6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 45.9조원
- 지역의 수요를 전제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 확대**(4.8→4.9조원)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 3개 사업 이관

## ◇ 재정지원 방향



##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생)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li> <li>■ (중장년) 의료주거비 부담완화 및 평생교육 확대</li> <li>■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돌봄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개별급여 인상</li> <li>■ (장애인)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li> <li>■ (농어민) 소득·경영안정</li> </ul> |
|---|---|

##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금연, 정신건강 등 국민 기초건강 증진

##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b>행복주택</b>	3.8만호	4.8만호
<b>난임지원 대상</b>	평균소득 150% 미만	전계층
<b>한부모가정 양육비</b>	만 12세 미만 월 10만원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b>중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b>	(단독) 3억한도, 80% (공동) 6억한도, 80%	(단독) 4억한도, 90% (공동) 8억한도, 90%
<b>행정복지센터</b>	700개	2,100개

## [1] 저출산 극복 지원

### 1 결혼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8→4.8만호)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2천호)
  - \* 기존 아파트를 매입, 신혼부부·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리츠 방식)
-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대출한도 지원\*\*
  - \* 구입자금 금리: (기존) 2.3%~3.1% → (변경) 2.1%~2.9%
  - \*\* 우대금리(%p) : (구입) 다자녀·생애최초 0.5, 신혼부부 0.2 (전세) 다자녀 0.5, 신혼부부 0.2  
전세자금 한도(억원) : (수도권) 일반 1.2/신혼·다자녀 1.4 (지방) 일반 0.8/신혼·다자녀 1.0

### 2 임신·출산 :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

- (난임)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5→9.6만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
  - 임신부·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별 150개소 체육교실을 지정하여 여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신규 3억원)
- (분만)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속 확충(14→16개소) 및 다자녀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가능기간 확대\*
  - \* (현행) 10일 → (개선)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3 보육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환경 개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지원한도를 인상(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하고 지원비율도 확대(80→90%)

- (보육지원 강화) 맞춤형보육 정착을 위해 영유아보육료를 지속 지원하고, 공립·공공형어린이집 각 150개소 등 공보육 확충\*
  - \* (공립)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교사추가증원(+1,232명), 인건비(+494억원)  
(공공형) 공공형(+150개소, +50억원)
- 지역사회 이웃간 돌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확대(52→66개 지역)
- (돌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0→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 청소년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월 15→17만원으로 인상

#### 4 일가정양립 : 맞벌이가구 시간지원 확대

- (모성보호) 출산·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15만원 인상(135→150만원)하고, 육아휴직 지원인원을 확대(9→10만명)
-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만2세 이하로 상향
  - \* 지원연령 : ('10) 만0세 이하 → ('14) 만1세 이하 → ('17안) 만2세 이하
- (남성의 육아참여) “아빠의 달” 지원 인원 확대(1,800→2,300명) 및 두 번째 자녀부터 급여 상한액 인상(150→200만원, '17.7월 시행)
  -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두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1,000개(중소기업 600개) 확대(1,800→2,800개)

## [2]

##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 1 아동·학생 :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

- (학대아동)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30억원)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58→65개소)도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상담, 교육, 직업 체험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5→6만명)
- (대학생) 교육비 부담경감 지원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3.9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확대(2,719→2,915억원)
  -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1~3학년 → 1~4학년)과 지방인재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학년 → 1~2학년)
- (기숙사) 민간보다 저렴(월24만원 이하)한 행복기숙사 9개 건립

### 2 중장년 : 의료비·주거비 부담 완화와 평생교육 확대

- (의료비) 선택 진료제도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병상 2.3→5만개)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 지속 완화
- (주거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
  - \* (공급) ('16) 2.5 → ('17안) 4.6만호 (사업지 확보) '17년까지 15만호
- (평생교육) K-MOOC(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의 저변을 넓히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 \* ('15) 36개(국비29개) → ('16) 92개(국비55개) → ('17) 185개(국비100개)
  -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학위과정)과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학위 과정)을 통합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3 어르신 : 자립기반 및 안전망 확충

- (소득기반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수(480→498만명)를 확대하고 지원단가 인상(최대 20.4→20.5만원)
- (돌봄 강화) 식사, 목욕보조, 외출 동행 등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기본서비스 +5,000명, 종합서비스 +1,686명)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대폭 확대(17→50개소)하여 신규 봉사자를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
    - \* 노인돌봄 봉사자 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호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 (주거복지) 노인복지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1천호 수준 지속 공급

### 4 저소득층 : 개별급여 인상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 (급여 수준 향상)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 (현금급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월 11.3→11.6만원)
    - \* 최저 보장수준 확대(중위소득의 29→30%) 및 중위소득 인상(+1.73%)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에 집중하고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지원 확대
  -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원자를 확대(11,000→11,200명)하여 수급자의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
  - (자산 형성) 수급자·차상위의 취·창업 등을 위한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 지원 확대(2.5→2.78만 가구)

## 5 장애인 :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

-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를 신규 지원하여 가정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470→486개소)
- (활동지원)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 대상 인원(6.1→6.3만명) 확대
-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재활원내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 설치('17안 2억원, 총 104억원)

## 6 국가유공자 : 보상금 인상과 의료서비스 강화

- (보상강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상금(3.5%), 전몰·순직유족 보상금(5.5%) 인상
- (무공·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무공·참전수당 월 2만원 인상(무공 26~28→28~30만원, 참전 20만원→22만원)
- (보훈요양)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17안 21억원, 총 366억원)

## 7 농어민 : 소득·경영안정

- (직불금 단가 인상) 한·중 FTA에 따른 발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 밭고정 : 40 → 45만원/ha, 조건불리 : 농지 50 → 55만원/ha
- (재해보험 확대)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498→663억원)  
\* 농작물(축산) 66→69개, 수산물 24→27개, 종합위험보장 전환 4→5개
- (불법어업 방지) 어업지도선 건조를 지원(301→921억원)하고,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20→100억원)

### [3]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 □ 복지서비스 체감도 제고

-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개소)하여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 현장방문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지원
- 민간자원과 연계하고 사례관리 지원액을 인상(600→840만원)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지원 확대\*
  - \*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 ('16) 28 → ('17안) 124억원

#### □ 국민 기초건강 증진

- (감염병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296억원), 감염병 치료 전문병원 구축, 항생제 통합감시체계 마련(10→52억원)
- (결핵안심국가)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폭 확대(1→77만명) 및 고효능 치료제 무상제공
- (금연지원)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및 장기흡연자(8천명)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16) 69억원, 13천명 → ('17안) 99억원, 21천명
-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 대폭 확충
  -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 ('16) 148억원, 209개소 → ('17안) 167억원, 225개소
  -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 ('16) 20억원, 25개소 → ('17안) 33억원, 40개소
  -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입원수가를 '0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여 입원초기 치료여건 개선
    - \*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선(신규) : 211억원

## ◇ 재정지원 방향

##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 핵심전력 강화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사업 본격추진
- 차세대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대폭 보강

## 병영환경 개선

- 병 봉급 2배인상 완료,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배치, 캠프형인성함양프로그램 대상자확대

##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 국민안전

- 치안 및 재난 현장대응 능력 강화
- 테러 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 국민생활환경 개선

- 미세먼지, 배출가스, 석면 등 위해 환경요인에 대응
- 국민생활편의 제고

##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병 봉급 인상(상병)	17.8만원	19.5만원
전기차	0.8만대	1.5만대
기동순찰대	50개소	60개소
화상공증제도	-	신규도입

## [1]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 (미사일방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 지원(3,795→5,331억원)
- (한국형 전투기) '16년 체계기능 검토, '17년 기본설계 착수 등 보라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지원(670→3,030억원)
- (첨단전력)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 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대폭 보강

### □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으로 장병 복지 향상
  - 병 봉급 2배 인상을 완료(상병기준, '12년 9.8 → '17년 19.5만원)
  - 병 급식비 단가 인상(7,334→7,481원), 민간조리원 증원(1,767→1,841명), 특수근무자(잠수함 승선자, 지뢰탐지 작업병) 증식 확대로 급식 개선
-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30,709개),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병영 생활여건 개선

\* 하계전투복(1→2벌), 외출용 가방(총원의 30%), 동계생활모, 삼푸, 드로즈형 팬티, 정비·전차·취사병 피복(공용→개인용) 등 총 502억원

\*\* 의류대(더블백, 1.5→2만원), 귀덮개(1,241→2,300원), 세면주머니(2,500원→3,500원) 등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여단급→연대급) 확대 배치, 인성함양교육\* 대상자 확대 등으로 장병 복무적응 지원 및 사고예방 강화

\*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캠프형 인성프로그램(14.7→23.9만명, 총원의 53%)

## [2]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 □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현장 치안역량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치안 역량 강화
  - 현장영상시스템 신규구축(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노후 헬기·버스 교체(헬기 132→302, 버스 117→443억원) 등
- (묻지마 범죄 예방)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지원 등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5→17억원)
- (내진보강) 내진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 구축(신규 4억원) 및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강화(824→1,802억원)
-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비상상황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소방·해경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
  - (해경) 함정 건조·구조장비(총 45척\*) 도입 지원(416→674억원)
    - \* 3천톤 1척, 5백톤 8척, 중형방탄정 2척, 구조보트 10대 등
  - (소방) 충청·강원·호남권 119특수구조대 청사신축, 소방 헬기 확충(614억원) 등 119 특수구조대 지원(75→649억원)

### □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 (테러지휘체계 강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16.6.4) 본격 운영
  - \* 대테러센터(32명) :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및 테러경보 발령
- 대테러종합상황실 장비보강(5억원)을 통해 24시간 테러상황 관리
- (대테러 역량강화) 신형 방탄판,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테러 대응장비 등 군·경의 대테러 장비 보강(173→414억원)

## □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 (미세먼지 대응)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507 → 530개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강화
  - 전기차(0.8→1.5만대), 하이브리드 차(3.3→5만대), 수소차(71→200대)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3.8→6만대/7개 시도→전국) 및 수도권 진입제한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22 → 66대)
- (화학물질관리) 살생물제 함유제품 조사·위해성 평가, 흡입독성 시험시설 구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투자 확대
  - 국내 유통되는 살생물제 함유제품 조사(약 300종, 신규 70억원) 및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원)
- (석면제거) 군부대, 학교, 지하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제거 지원 확대(596→2,155억원)

## □ 국민 생활편의 제고

- (화상공증제도)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원격화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증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상공증제도 도입(신규 5억원)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차료·임대기간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속한 갈등 해결 지원
  - \* 법률구조공단 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 계획
- (비긴급 콜센터) 각종 신고번호를 112·119·110로 통합
  - 대표번호로 걸려온 비긴급신고는 비긴급 상담콜센터(110)로 자동 연결(26→51억원)
- (다국어 법령정보) 결혼 이민자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감안하여 기존 영어 중심 법령정보의 번역대상 언어를 지속 확대
  - \* ('16년) 영어·중국어 등 10개국→ ('17) 캄보디아어·네팔어(2개국 추가)

### Ⅲ. 재정개혁 추진

#### 1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인 제거

##### □ 재량지출 구조조정

-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
  - \* 성과미흡, 유사·중복, 여건변화 등 감안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
  - \* (국토부 사례) 고속도로 건설(1.4→1.3조원)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차 등 R&D투자 확대(6,933→7,319억원)
- 구조조정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경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 유사·중복 통폐합

- '15·'16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 기달성
- '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5→160개) 추가 통폐합
  - \* (주요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업사관학교)가 유사사업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 일원화

##### □ 재정사업평가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 대상사업 구조조정 실시

### □ 재정준칙 도입

- (재정준칙)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을 구체화
  - \* (채무준칙) GDP 대비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  
(수지준칙)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관리
- (Pay-go제도)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시기·방식 등을 통일하여 증장기 재정 수지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
-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간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흐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자산운용** 추진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R&D 분야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 SOC 분야
7. 농림·수산·식품 분야
8. 환경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
- ◇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저출산 극복

○ (결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격 실시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3.8→4.8만호)

○ (임신·출산) 난임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5→9.6만명)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산모도우미 이용가능기간 지원 확대\*\*

\* 평균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 ('16) 10일 → ('17안) 둘째아 최대 15일, 셋째아 이상 최대 20일

○ (육아) 출산전후 휴가 지원한도를 높이고(135→15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인상(10→12만원) 및 지원연령 상향(12→13세 미만)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한도(단독 3→4억, 공동 6→8억) 및 비율을 상향(80→90%)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고부가가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국민 기초건강 증진

○ (보건산업 육성) 의료기기·제약·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기술 사업화 신규 지원

○ (국가예방접종 확대)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신규 추가(210만명, 296억원)

○ (결핵안심국가) 결핵 발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 확대

\* 잠복결핵검진 : ('16) 1만명 → ('17안) 77만명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복지 체감도 제고

-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127→134만원/월,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 인상(11.3→11.6만원/월)
- (장애인) 장애인가정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을 확대(6.1→6.3만명)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127억원)
-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480→498만명)하고 노인일자리(38.7→43.7만개)를 늘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학대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30억원)하고 부모교육을 신규 지원(39억원)
- (위기가구)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대폭 확대(700→2,100개)하고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

□ 청년·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13→16만명)하고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
-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150→155개소)하여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월 2만원 인상

(억원)

구분	'16	'17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01,311	103,434	· 생계급여(32,728 → 36,191)
▪ 취약계층지원	24,989	25,403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4,370→4,551)
▪ 공적연금	427,062	453,998	· 국민연금급여지급(185,488→199,043)
▪ 보육·가족·여성	57,654	58,520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8,168→8,607)
▪ 노인·청소년	94,210	97,327	· 기초연금지급(78,692→80,961)
▪ 노동	172,950	188,353	· 구직급여(51,228→56,613)
▪ 보훈	48,181	49,811	· 보상금(25,130→26,047)
▪ 주택	194,381	211,800	· 행복주택(13,211→25,070)
▪ 사회복지일반	7,917	8,280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833→902)
▪ 보건	105,339	103,080	· 건강보험가입자지원(70,974→68,764)
합계	1,233,995	1,300,006	5.3% 증가

## <참고> 일자리 분야

-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
- ◇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통해 노동시장 참여 유도

-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등 유망산업 투자 확대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교육, 사업화 등 창업 쏠단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신규 도입(500개팀) 및 청년 전용 창업자금(1,000→1,200억원) 등 창업지원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13→16만명), 일학습병행(3→5만명), 해외취업지원 등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또한, 바이오, IoT 등 미래유망 분야 훈련과정 신설(10개 과정, 200명) 및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신규 지원

\* 전문대: ('17) 748억원(신설), 일반대: ('17) 220억원(신설)

- 취업 후에는 장기근속 가능하도록 2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1→5만명)

###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창출·안정효과 극대화

- (여성) 출산, 복직, 복직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135→150만원)하고, 휴직후 복직이 용이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월 20→30만원)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20→40만원)하고,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프라 구축 지원
-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만명)를 신규 도입하고 표준사업장 확대(28→32개) 등 근로환경을 개선

- (노인) 노인일자리 및 장년인턴제를 확대(+6.4만명)하고, 임금 피크제 지원인원 확대(0.9→1.1만명) 통해 장년층 고용안정 유도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및 지원수준 확대

\* 임금상승분의 70% → 임금상승분 80% (한도 40만원)

#### □ 고용서비스 확충 및 고용안정망 확대

- 고용복지+센터(70→100개소)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70개소) 확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포털 구축 등 **On/Off Line 고용서비스 확충**

\* (1단계) 각 부처 구인정보(워크넷), 직업훈련(HRD-Net), 직접일자리(일모아)를 연계 → (2단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17.12월)

- 고용복지+센터장 공모 및 신규로 설치하는 6개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알선 등을 민간이 담당

- 실업급여(5.1→5.7조원) 및 산재보험급여(4.3→4.6조원) 보장성 강화

\* 상한액(4.3→5.0만원) 인상, 지급기한 +30일 연장 // 출퇴근 재해 인정

#### □ 일자리 투자확대와 함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노력 병행

- '20년까지 일자리 사업의 약 10% 구조조정(1.6조원)

- '17년에는 직접일자리, 조기재취업수당, 중소기업청년인턴 등 성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0.4조원 감액 또는 폐지

(억원)

구분	'16	'17안	비고
▪ 직접일자리	26,257	26,242	노인일자리 확대 39→44만명(+5만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20,992	23,565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확대 0.6→1만개(+0.4만개)
▪ 고용서비스	6,821	8,287	고용복지+센터 확대 70→100개소(+30개소)
▪ 고용장려금	28,351	32,455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도입(5만명)
▪ 창업지원	18,806	21,964	창업성공패키지 신설(500팀)
▪ 실업소득 유지·지원	57,019	62,716	구직급여 상한액 (4.3→5.0만원) 인상, 지급기한 +30일 연장(90~240일→120~270일)
합계	158,245	175,229	

- ◇ 대학 자율성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확대 및 특별회계 신설

-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
  - 대학 자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은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594/32 → 744억원/40개교)
    - \* 발전지표, 정성평가 비중 확대 및 대학 스스로 성과지표 설정 등
  - 대학특성화·산업연계교육활성화 사업·인문역량강화 사업 등은 '19년 통합 운영\*에 대비하여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규모 조정
    - \* 연구·대학특성화·산학협력·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 사업으로 통합
-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도전적 창업 지원 기반 확충
  - 기업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를 위한 사회맞춤형 학과 신규 투자(968억원)
    - \* 전문대 748억원/44개교, 일반대 220억원/20개교
  -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 조성 (신규 150억원)
- 국립대 혁신과 맞춤형 발전전략 지원으로 국립대 경쟁력 강화
  - 조직·인사·재정 전반에 대한 국립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맞춤형 국립대 발전전략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 국립대학 혁신지원 : ('16)85 → ('17)210억원(연구용역비 10억원)
  - 등록금 동결·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 기본운영비 지원을 대폭 확대
    - \* 국립대 기본경비 지원 : ('16)1,357 → ('17)1,503억원(10.8% 증)

□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지원은 확대

\* 맞춤형 국가장학금 : ('16) 3.9 → ('17) 3.9조원

\* 교외근로장학금 : ('16)33 → ('17)37만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 ('16) 2,670 → ('17) 3,600명

□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등 전 국민의 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On-Off 라인상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대학 우수 강의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16) 40 → ('17안) 69억원

\* ('15) 36개(국비29개) → ('16) 92개(국비55개) → ('17) 185개(국비100개)

○ 대학평생교육사업은 학위과정 사업과 학점인정·비학위과정 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평생교육단과대 사업 +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및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 교부금을 대폭 확충(41.2 → 45.9조원, 11.4%)하고,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유아·초중등교육	430,588	461,85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41.2 → 45.9조원)
▪ 고등교육	93,593	94,443	·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594 → 744) · 사회맞춤형 학과지원(신규 968) · 대학생 창업펀드 조성 지원(신규 150) · 국립대학 혁신지원(85 → 210) · 국립대 기본경비 지원(1,357 → 1,503)
▪ 평생·직업교육	6,577	6,965	· K-MOOC 강좌개발 및 운영(40 → 69)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신규 257)
▪ 교육 일반	1,101	1,098	· 인건비(623 → 623), 기본경비(262 → 254)
합 계	531,859	564,365	6.1% 증가

- ◇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스포츠·관광·문화의 고부가가치화
-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문화융성을 위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거점을 구축 완료하고 지방으로 확산
  - K-Culture Valley(고양), K-pop아레나(송파) 조성 완료, 문화창조 아카데미 확장·이전(청계천, 1개 과정 → 홍릉, 3개 과정, '17.3월)
  - 국내외 유망스타트업 입주공간 및 지방 문화벤처단지 신규 조성(2개소)
- 청년층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 지원 확대(413→633억원) 및 가상현실(VR) 산업 신규 지원(192억원)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5만원→6만원/년)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단가(7만원→8만원/월, 만5~18세) 인상
-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 신설(45억원) 및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 확대('16 추경 5→11개소)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K-pop 공연 등 한류를 관광상품으로 육성
  - \*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48→58억원), 한류관광활성화(23→56억원)
- 10개 권역별 관광자원(관광지, 숙소, 음식점, 특산품 등)을 활용, 명품 관광코스 개발 및 국내외 홍보
  - \* 명품 관광루트(십리대숲, 대왕암, 태화강 등) 개발,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 활용 고품격 숙박체험 브랜드 구축, 유명음식·특산품의 명품화 컨설팅 등

- 창업 초기 관광기업을 위한 **마이크로 벤처\*** 펀드(신규 50억원) 조성 및 크라우드 펀드 유치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신규 15억원)

\* 아이디어 중심의 초기 관광기업에 5억원 미만의 소액투자전용펀드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산**

- 12개 경기장 및 진입도로·간선교통망 등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인프라 완공**

- 동계종목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맞춤 지원 확대** (179→228억원)

\* 경기장 사전 적응훈련, 최고 수준의 외국인 코치 초빙 등

- 축구를 대상,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 도입 (신규 28억원)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324→400명)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신규지원(월 10만원)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확대**

- **경복궁 궁궐축전(20→30억원)**, 지역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 (73→115억원) 등 문화재 활용을 중점 지원(202→274억원)

-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을 활용한 고품격 숙박시설 구축·운영을 신규 지원(K-heritage Inn으로 브랜드화, 48억원)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문화예술부문	26,319	28,282	·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신규 192) · 게임산업 육성(413→633) · 문화향유권 확대(181→307)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70→291)
▪ 관광 부문	14,111	16,510	· 관광 콘텐츠 활성화(106→194) · 핵심관광지 육성(신규 240)
▪ 체육 부문	15,386	14,984	· 동계스포츠육성(179→228) · 스포츠산업활성화(343→533)
▪ 문화재 부문 등	10,481	11,070	· K 헤리티지 인(신규 48) · 문화유산 활용진흥(202→274)
합 계	66,297	70,847	6.9% 증가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확대
- ◇ 수요자 중심의 R&D지원 제도개편을 통한 전략적 투자 강화
-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역할 강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지속 육성

-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300억원)
  - \* (성장동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 \* (국민행복)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AI-로봇 융합, ICT 유망기술 등 지원 강화
  - \* 제4차 산업혁명 대응 : ('16) 3,147→('17안)4,395억원(증 39.6%)
-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18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집중 지원
  - \* 18대 미래성장동력 : ('16)1.2 → ('17안)1.3조원(증 8.3%)
- 新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Mission Innovation) 지원 강화\*
  - \* ('16)4,536 → ('17안) 5,844억원(증 28.8%)

#### □ 수요자 중심, 생활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 기업이 R&D 수행 시 대학 및 출연연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R&D바우처 제도 확대
  - \* R&D바우처 지원 : ('16)3,775 → ('17안)7,147억원(증 89.3%)
- 오염저감 및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신경질환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 지원 강화\*\*
  - \*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 지원기술 : ('16)54→('17안)81억원(증 50.5%)
  - \*\* 뇌과학원천기술개발 : ('16)326→('17안)410억원(증 25.7%)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역할 강화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
  -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R&D 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자체·수탁사업 확대(948→1,514억원), 인력확대(204→289명) 및 차등지원

□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한 지출효율화 추진

- 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활성화\*

\* 인센티브 재원('17안 264억원) 중 성과연동 지급액 비중 50→60% 확대

- 국방 R&D 예산편성시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 국방 R&D도 '17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

- 지역 R&D 센터\* 및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지원체계 정비

\*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R&D센터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효율화 방안 마련

\*\* 모든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시 30개월 Pilot & 타당성 조사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기초·나노	21,955	28,632	· 개인기초연구지원(8,755→10,130) ·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132→196)
▪ 에너지·환경	23,199	23,515	· ESS기술개발(신규 437)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528→770)
▪ 우주항공·생명 등	56,100	57,253	· 달탐사(200→710) ·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2,616)
▪ 기계·제조·공정	15,164	14,876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722→884) ·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159→266)
▪ 전자·정보	24,981	23,798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신규 70)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98→113)
▪ 기타	49,544	46,297	· 인문사회 기초연구(1,364→1,514) · 6개월챌린지및액셀러레이터연계지원(204→241)
합 계	190,942	194,371	1.8% 증가

- ◇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수출기업의 맞춤형 선택권 강화
- ◇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R&D·수출 지원 신설
- ◇ 창업성공패키지 도입 등 창업지원시스템 강화·확대

- (수출) 수출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新시장 진출을 지원
  -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신규 1,778억원)
  - 성과가 좋고 기업 선호도가 높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46→91억원) 지원 및 해외전시회(219→229억원) 참여 지원 확대
  -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아세안·중동 등 新시장 진출 쏠 과정을 지원(신규 120억원)
  - 아세안·중동·남미 등 시장 개척을 위해 농식품 新시장 수출 개척단 운영(신규 92억원)
- (창업) 유망한 아이디어를 더 쉽고,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을 개선·확대
  -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 → 사업화 → 자금 → 판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도입(신규 500억원)
  - 대학(원)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34→40개교)하고, 사업화자금 지원도 강화(460→572억원)
  - 선도 벤처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확대(560→770억원)
  - 창업자금(1.45→1.65조원), 청년전용 창업자금(1,000→1,200억원) 등 창업자 자금 지원(융자) 확대

- (중견기업)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및 수출 지원 확대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 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 → 1,137억원)
  -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도입(100억원)하여 기업이 해외현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16→17조원) 및 융자(1.56→1.61조원) 규모를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0.6→0.8조원)
  -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32곳)하고,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청년몰 추가 조성(17개소)
- (에너지)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개발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복지 확충
  -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불용자를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로 개편
    - \* 사업실패시 원리금 상환 일부 면제, 용자비율 80→30% 등
  - 에너지물가 상승과 연계하여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지속 개선
    - \* 3개월 평균 10.8 → 11.6만원(단,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포함)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산업진흥·고도화	87,691	88,074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125→438) ·조선산업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신규 173)
▪ 무역 및 투자유치	5,634	5,817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88→119)
▪ 에너지 및 자원개발	35,462	33,650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5,000→3,500) ·석유비축사업 출자(1,037→657)
▪ 산업·중소기업 일반	5,285	5,456	·인건비, 기본경비 등
▪ 산업금융지원	16,003	11,864	·신성장기반자금용자(11,500→8,900) ·긴급경영안정자금용자(1,550→800)
▪ 산업기술지원	12,569	14,483	·개발기술사업화자금용자(3,500→5,750)
합 계	162,644	159,344	△2.0% 감소

- ◇ SOC 규모 단계적 정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 산업 기반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 첨단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 SOC 투자 단계적 정상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G20 대비) : 고속도로 1위, 국도 3위, 철도 6위

- 주요 교통 기간망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지원

\* 도로·철도 완공 : ('16)85건, 1.5조원 → ('17안)93건, 1.5조원

- 기존 SOC 시설 활용률 제고하여 신규건설 소요를 최소화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한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

#### □ 신공항 및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을 적기 지원

- 김해와 제주도에 건설될 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지원(신규 95억원)

- 주요 도로·철도망의 적기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신규 65억원) 등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중) 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 □ 항만 및 산단 등 산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항만 배후단지 중점 지원(555→634억원) 및 노후·유휴 항만을 활용한 해양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고

\* 부산 및 광양 항만 클러스터 조성·개발 계획수립비(신규 3억원)

- 노후공단 재정비, 산단 진입도로 및 공업용 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개수 : ('16)11 → ('17안)12개

□ SOC 투자 기술 선진화 및 R&D 투자 강화

- 건설 및 도시관리 기술(특수구조물, 초고층빌딩 등), 홍수 예보 고도화 등을 통해 투자 효과 및 안전성 제고

\* 시공 자동화 및 특수구조물 구축 분야 R&D(168→269억원) 등

-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자율자동차 R&D(90→209억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신규 40억원) 등

□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SOC 안전투자 강화

- 도로교량 내진보강 및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 보강(0.7→0.8조원)

- 가뭄 예·경보 대응시스템 마련(신규 12억원) 및 댐 치수능력증대·하천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를 통해 재해 대응역량 강화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도로	83,409	74,134	· 국도건설(3.5→2.5조원)
▪ 철도	74,646	68,041	· 일반철도건설(4.5→4.3조원)
▪ 해운·항만	18,003	17,417	· 신항만건설(0.6→0.6조원)
▪ 산업단지	6,280	4,806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0.5→0.4조원)
▪ 수자원	21,496	18,612	·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0.3→0.1조원)
▪ 물류, 지역·도시 등	33,120	34,612	· 지역개발사업(0.4→0.3조원)
합 계	236,953	217,622	△8.2% 감소

- ◇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 ◇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경영체 육성 강화
-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및 불법어업 감시 강화

#### □ ICT융복합,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 시설원예, 축산 농가 대상 스마트팜 보급 확대
  - \*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신규 35억원), 스마트축사(200→269억원)
- 지역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형 모델 발굴 등 6차산업화 촉진
  -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15→19억원), 6차산업 지구 확대(10개소, 45억원 → 13개소, 68억원), 어촌특화지원센터(2→4개소)
-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및 들녘경영체\*\* 확대
  - \* 발작물공동경영체(누계) : ('16)15 → ('17)35개소
  - \*\*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모델(누계) : ('16)271 / 22 → ('17)320개소 / 27개소
- 선진 양식기술 보급확대\*로 양식 생산성을 제고하고, 관상어 산업육성\*\*
  - \* 양식기반시설 (연구·양식시설) : ('16)140 → ('17)183억원
  - \*\* 관상어 산업육성 (신규 17억원)

#### □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92억원),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신규 9억원)
-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 본격화를 위해 K-Food Zone(신규 23억원, 중국 1개소),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3→7개소)

□ 경영체 유형별 지원 강화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자가진단시스템 개발(신규 9억원)
- 농업후계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160명 확대(390→550명)
- 농가의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지원(신규 8억원), 품목특화 전문과정 확대(4→7개 품목)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및 불법어업 감시 강화

- 한·중 FTA 여야정 협의결과에 따라 받고정직불 및 조건불리 직불의 지급단가 인상
  - \* 발농업직불 : 40→45만원/ha, 조건불리 : 농지 50→55만원/ha
-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498→663억원)
  - \* 농작물(축산) : 66→69개(시설썩갓, 무화과, 유자), 수산물 : 24→27개 (메기, 바지락, 모자반류)
- 불법어업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지속지원 및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 \* 어업지도선 건조 : 301→921억원, 불법어업방지시설 : 20→100억원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농업·농촌	145,182	145,249	· 쌀소득보전변동 7,193→9,777억원 · 산지유통종합자금 5,328→6,993억원
▪ 수산·어촌	20,321	20,967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58→298억원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233→264억원
▪ 임업·산촌	20,240	20,430	· 귀산촌창업자금 지원(신규 240억원)
▪ 식품업	8,203	8,489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규 92)
합 계	193,946	195,136	0.6% 증가

- ◇ 하수도 정비사업 내실화,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신규 투자
- ◇ 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환경위해 요인에 적극 대응

- (상하수도) 하수도는 노후시설 개량·보수사업 위주로 내실화
  - (하수도)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투자를 확대
    - \* 면단위 하수처리장(936 → 1,01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2,966 → 3,287억원)
  - (상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22개)에 대해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신규 512억원)
- (대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투자확대로 국민안전 및 건강보호 강화
  - 전기차(0.8→.5만대), 하이브리드 차(3.3→5만대), 수소차(71 → 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2,102 → 3,305억원)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7개 도시→전국),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확충(22→66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 지원
  - 대기측정망 확충(507 → 530개) 및 중국 주요도시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 확대, 예보모델 고도화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지속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 (환경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환경산업육성 지원 확대
  - 환경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200억원)
  -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연차소요 지원 등 물산업 신기술 개발·연구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보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 가슴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피해 판정병원 확대(1→8개),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 등 지원 강화(11→201억원)
- 살생물제 조사 및 위해성 평가, 흡입독성 실험기반 구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확대

\* 살생물제 조사(신규 7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신규 80억원)

□ (자연) 생태계 보존·복원 강화 및 환경산업 유용기술 개발 지원

- 국립공원·생태관광지역 등의 **환경자원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외래 동식물 퇴치**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

\* 환경지킴이(262 → 27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95 → 235억원)

-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해 **고유생물자원 확보·유전정보 축적**, **환경산업 생물자원 발굴**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지원(332 → 404억원)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을 제고 및 폐기물 에너지화 지원

- 자원 회수센터, 업사이클 센터를 확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확대**

\* 재활용 및 업사이클 센터(39 → 78억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67 → 110억원)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상하수도·수질	43,448	41,373	·농어촌 마을하수도 +321, 면단위 하수처리장 +74
▪ 대기	4,215	5,795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1,158, 조기폐차 +177
▪ 환경 일반	9,398	9,699	·미래환경산업 투자 펀드 +200, 가슴기 피해지원 +190
▪ 자연·해양환경	8,091	8,361	·생물자원 보존·관리 및 대량증식 +72
▪ 폐기물	3,477	3,453	·업사이클링센터 +40, 친환경 에너지타운+43
합 계	68,629	68,681	<b>0.1% 증가</b>

◇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 북한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및 병영여건 개선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한국형 전투기 개발(보라매) 사업 본격 추진 및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적극 대응
  - \* 방탄복, 폭발물처리장비 등 대테러장비 및 무기 : ('16) 98 → ('17안) 256억원
-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및 GP·GOP 등 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성과기반 군수지원 등 적정 군수지원으로 현존 전력을 극대화
  - \* 연평도 진지 등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 : ('16) 304 → ('17안) 303억원
  - \* GP·GOP 초소·철책 등 경계시설 보강 : ('16) 586 → ('17안) 833억원
  - \* KF-16 정비 등 군수지원 성과에 따라 대금 지급 : ('16) 2,153 → ('17안) 2,651억원

### □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 병 봉급의 '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을 완료하고, 급식단가 인상 및 민간조리원 증원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 제공
  - \* 사병봉급단가(상병기준, 만원/월) : ('12) 9.8 → ('14) 13.5 → ('17안) 19.5
- 전체 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하계전투복 추가지급, 독신숙소 공용비품 보급,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인상으로 생활여건 개선
- 독서카페 개선·확대,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캠프형 인성함양 교육 및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를 통한 부대 적응 지원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병력운영	164,067	171,464	· 병사 봉급 9.6% 인상(9,737 → 10,472) · 영내자 급식비 2% 인상(11,862 → 11,956)
▪ 전력유지	107,530	110,293	· 군수지원 및 협력(46,021 → 47,421) · 군사시설 건설·운영(26,567 → 27,457)
▪ 방위력 개선	116,398	121,590	· KAMD(3,795 → 5,331) ·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670 → 3,030)
합 계	387,995	403,347	4.0% 증가

- ◇ 외교역량 강화 및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통일준비 사업 지속 추진

- 외교수요에 부합하는 외교역량 강화 및 재외국민·공관 안전제고
  - 한국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
    - \* 아시아(60→76억원) / 중남미(42→55억원) / 아프리카(66→84억원)
  - 테러·자연재난 대비 재외국민·공관 안전 및 재외국민 편의 제고
    - \* 재외공관 안전강화(161→168억원) / 재외국민보호(101→104억원)
- 지속가능개발목표 시대를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 2차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강제피난민 6천만명 돌파)에 따른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
    - \* 인도적 지원 (450 → 848억원) / 유엔난민기구 분담금 (34 → 38억원)
  - SOC 기본계획 수립, 질병예방원조 및 지역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참여 확대
    - \* 국제개발협력사업지원 (54 → 92억원) / 개발행동프로그램 (104 → 195억원)
- 인도적 문제해결, 통일문화 공감대 확산 등 통일준비 지속 추진
  -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 수립·추진 및 인프라 구축 확대와 이산가족 역사·문화 보존을 통한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강화
    - \* (북한인권 관련) ('16) 52→('17) 149억원 / (이산가족문제해결) ('16) 2→('17) 12억원
  - 통일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확대(2 → 4분야) 및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등을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
    - \* (통일문화 관련) ('16) 4→ ('17) 34억원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외교 부문	31,498	33,270	· 인도적 지원(450→848)
· 통일 부문	15,293	12,811	· 남북협력기금(12,550→10,012)
합 계	46,791	46,081	△1.5% 감소

◇ 강력범죄 예방 등 범질서 확립 및 법률소외계층 지원 강화

◇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재해예방 인프라 지속 확충

-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 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 예방 강화
  - 경찰·검찰 인력을 지속 증원\*하고, 현장영상시스템(신규 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등으로 야간 취약지역 순찰 강화
    - \* (경찰) 11.9 → 12.0만명(+1,441명), (검사) 2,112 → 2,182명(+70명)
  -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한 과학수사장비확충(14→22억원)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헬기 132→302, 버스 117→443억원)로 기동성 강화
  - 불특정 대상 범죄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범죄경력자 등 치료 관리(5→17억원) 및 장갑차 등 대테러 장비 확충(75→158억원)
- 범죄피해자는 물론 국가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저소득 계층 등에 대한 법률복지제도 강화
  - 상근진술조력인(광역지자체, 9→11지역), 진술분석전문가(2.5→3.2천건) 확대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국가배상금 증액(550→1,000억원)
  - 법률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확대(40→60명) 및 급증하는 난민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신규 7억원)
-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해예방·대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국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 119특수구조대 시설·장비확충(75→649억원), 내진보강 관리시스템 구축(4억원) 및 국민안전의식 선진화(32→46억원) 등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법무 및 검찰	32,067	34,039	· 국가배상금(550→1,000, +450)
· 경 찰	101,467	104,191	· 경찰인력증원(1,441명 순증)
· 법원 및 헌재	18,234	19,070	· 등기소 신증축(등특)(180→254, +74)
· 해 경	12,767	12,037	· 연안구조정(12대), 해상대테러장비(10억) 확충
· 재난관리	10,436	11,036	· 재해위험지역정비(3,537), 소하천정비(2,115)
합 계	174,971	180,374	3.1% 증가

- ◇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 ◇ 정부3.0 확산·생활화 및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 지원

-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4.5조원 증액(36.1→40.6조원)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
  - 광역시·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조정하여 재정 형평화 기여
  - 지자체 재원부족 대비 0.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행복 증진 도모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기반조성, 튼튼한 지역 경제·금융 환경 마련,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발전 추진
-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3.0'의 확산·생활화 추진
  - \* 정부3.0 변화관리 : ('16) 40억원 → ('17) 50억원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속 추진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행정한류 확산
  - 외국공무원교육기관에 교육훈련 노하우 전수 및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
    - \* 외국공무원교육기관 컨설팅(5억원),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총회 개최(6억원)

□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에 중점 지원**

\* 대통령선거 비용·정당보조금 : ('12년) 2,187억원 → ('17년) 2,646억원

○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정착을 차질 없이 뒷받침**

\* 사전투표(모든선거에 실시) : ('13) 재·보선 → ('14) 제6회 지방선거 → ('16) 제19대 총선

\* 재외선거(대선·총선에 실시) : ('12) 제19대 총선·제18대 대선 → ('16) 제19대 총선

□ **한국재정정보원 운영(158억원)을 통해 재정운용 관리체계 개선**

○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신속히, 폭넓게 제공**

(억원)

구 분	'16	'17안	비고
▪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지방채인수 제외시)	382,624 (6,895)	414,478 (6,921)	· 지방교부세(361,324→406,357) · 지방채인수(14,406→1,200)
▪ 재정·금융	167,193	178,311	· 복권사업비(22,227 →23,471)
▪ 입법 및 선거관리	12,219	11,664	· 대통령선거관리(1,804)
▪ 정부자원관리 등	7,188	8,641	· 전자정부지원(1,215→ 1,237)
▪ 일반행정	20,576	20,605	· 정부청사노후시설정비(55 → 184)
합 계	595,167	639,064	7.4% 증가